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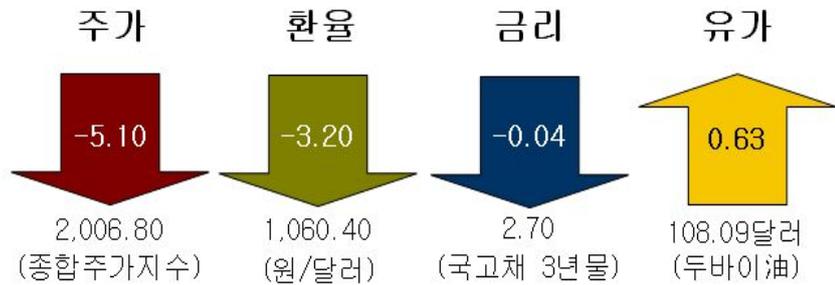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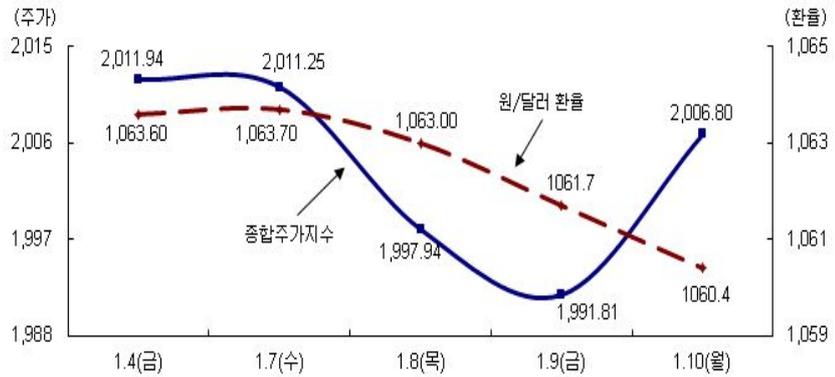
□ 새 정부 출범과

2013년 국내 10대 트렌드

- | | |
|-------------------|--------------|
| ① 트라이 다운의 반전 | ⑥ 서비스업 비상 |
| ② 갈림길에 선 일자리 전쟁 | ⑦ 월드베스트로 질주 |
| ③ 복지 확대 속 '눔프' 현상 | ⑧ 기업시민 역할 확산 |
| ④ 응답하라! 부동산 | ⑨ K-Wave 전성기 |
| ⑤ 제3차 제조업 혁명 | ⑩ 남북관계 리셋 |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1.4~1.10)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새 정부 출범과 2013년 국내 10대 트렌드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22

□ 본 자료는 기업 경영인들을 위해 작성한 국내외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괄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2072-6210, bkyoo@hri.co.kr)
 □ 작성 : 김 동 열 수석연구위원 외 9인 (2072-6213, dykim@hri.co.kr)

Executive Summary

□ 새 정부 출범과 2013년 국내 10대 트렌드

■ 새 정부가 출범하는 2013년 국내경제는 거시경제, 산업, 경영, 사회문화, 남북관계 등의 분야에서 아래와 같은 10가지 트렌드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 거시경제

① **‘트라이 다운’ (Tri-Down)의 반전** 한국경제는 소비, 투자, 수출 등 내외수 동시 부진, 즉 ‘트라이다운’(Tri-down)에 직면하고 있으나, 2013년 이후 추세 반전이 기대된다. 민간 소비, 건설 및 설비 투자는 올해보다 개선될 것이고, 수출도 주요국 경기 회복에 힘입어 플러스 성장률로 돌아설 것이 전망된다. 이와 같은 경기하락 추세의 반전이 가시화되기 위해서는 내수 진작을 위한 재정투자 확대, 적극적인 기업 금융 확대, 기업 투자심리 개선, 서민과 가계의 불안심리 해소, 수출 틈새시장의 개척, FTA 활용 극대화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② **갈림길에 선 일자리 전쟁** 고용 사정이 크게 악화되면서 2013년 주요 경제 화두는 단연 일자리가 될 전망이다. 일자리 고통이 청년을 넘어 고령층, 여성, 베이비부머, 비정규직 등 전 계층으로 확산됨에 따라, ‘더 많고 더 좋은 일자리’를 위한 아이디어가 쏟아지면서 노·사·정의 이해가 충돌할 우려가 있다. 일자리 전쟁으로 사회 갈등이 증폭될 것인지, 아니면 고용창출형 성장협약을 맺어 성장과 일자리를 동시에 달성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인지, 한국사회는 기로에 서 있다.

③ **복지 확대 속 ‘눔프’ (NOOMP) 현상** 2013년에는 복지서비스 확대 속에서 자기 부담은 꺼려하는 ‘눔프’ 현상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복지확대 속에서 복지예산이 처음 100조원을 넘길 전망이며, 증세 방안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제한된 예산 한도 내에서 복지서비스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려고 한다면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강하게 반대할 것이다. 이러한 갈등을 조정해낼 소통의 리더십이 중요해질 것이다.

④ **응답하라! 부동산** 2013년 주택시장은 침체 속에서 3가지 특징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지역별로 ‘수도권 침체 심화, 비수도권 침체 반전’이 예상되어 전국 동시 침체가 예상된다. 둘째, 소형 가구 증가세가 뚜렷한 반면 중대형 가구는 오히려 감소되면서 소형 강세와 중대형 약세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매매 시장의 불안정 등으로 주택 매입수요가 위축되면서 전세시장은 여전히 강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 산업·경영

⑤ **제3차 제조업 혁명**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었던 국내 제조업이 IT기술과 디지털 혁명을 바탕으로 한 제3차 제조업 혁명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요자들의 제품 차별화 요구에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특히 IT융합, 제조업의 서비스화, 네트워크 생산, 맞춤형 생산 등을 통한 진화가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⑥ **서비스업 비상(飛翔)** 한국의 경제발전 단계가 높아지면서 서비스업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생산성 증대와 고부가가치화 등의 자구 노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외국인의 국내 서비스업 투자가 증가하고 국내 업체는 외국기업과 치열한 경쟁에서 생존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셋째, 업계와 정부의 서비스 수출 확대 및 해외 시장의 진출 노력이 가속화 될 것이다.

⑦ **월드 베스트(World Best)로 질주** 전통적인 글로벌 선진기업마저 도태되고 세계 최고의 기업만이 살아남는 글로벌 경제위기의 극복과정에서, 세계일류 수준으로 거듭난 국내 기업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국내기업들의 월드베스트로의 질주는 세계 일류상품의 지속적 증가를 통해 잘 나타나고 있으며, 2013년에도 시장점유율 일등을 넘어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의 성장이 지속될 전망이다.

⑧ **기업시민 역할 확산** 기업의 지속가능성은 이제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하며, 그와 같은 기업시민의 역할이 확산될 전망이다. 특히나 2013년은 불확실성이 높은 경제 상황이 예상되고 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더욱 강조되고, 투명·윤리경영이 생존 문제로 직결되며 人權경영이 화두로 부상할 것이다.

■ 문화·남북

⑨ **K-Wave 전성기** 2012년 서구로의 확산에 성공한 한류는 2013년에도 기세를 이어나가며, 문화 트렌드의 수준을 넘어 세계인들이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관심을 갖는 본격적인 K-Wave 시대가 기대된다. 이미 한류는 세계 문화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한국이 문화 강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중이다. 성공 가능성을 증명한 K-Pop을 비롯하여 영화, 드라마 등 스토리 콘텐츠 역시 확산 지역을 넓혀가면서 한류의 보다 적극적인 세계 시장 도전이 전망된다.

⑩ **남북관계 리셋(Reset)** 2013년 남북관계는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새정부 출범과 대북 정책 전환 요구에 대한 목소리 증대 등으로 새롭게 출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합의 존중과 상호 신뢰 회복을 강조하는 유연한 방향으로의 대북 정책 변화로 중단된 남북경협 사업 재개와 신북방정책 추진에 따르는 대규모 SOC 수요 창출, 남북경협의 국제화와 대규모화 등이 본격적으로 구상될 것이 예상된다.

I. 10개 트렌드 선정

- 새 정부가 출범하는 2013년도에 예상되는 국내 트렌드를 거시경제, 산업, 경영, 사회문화, 남북관계 등의 분야로 세분하여 10가지로 정리해 보았음
- 2013년 거시경제 부문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트렌드는 ‘트라이 다운 (Tri-Down)의 반전’, ‘갈림길에 선 일자리 전쟁’, ‘복지 확대 속 늪프 (NOOMP)현상’, ‘응답하라! 부동산’ 등 4가지가 선정됨
- 산업·경영 부문에서는 ‘제3차 제조업 혁명’, ‘서비스업 비상(飛翔)’, ‘월드베스트 (World Best)로 질주’, ‘기업시민 역할 확산’ 등 4개 트렌드가 형성될 것으로 보임
- 문화·남북 부문에서는 ‘K-Wave 전성기’, ‘남북관계 리셋(Reset)’의 2개 트렌드가 전망됨

< 2013년 국내 10대 트렌드 >

분야	트렌드 내용
거시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트라이 다운(Tri-Down)의 반전 - 갈림길에 선 일자리 전쟁 - 복지 확대 속 ‘늪프’(NOOMP) 현상 - 응답하라! 부동산
산업·경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차 제조업 혁명 - 서비스업 비상(飛翔) - 월드 베스트(World Best)로 질주 - 기업시민 역할 확산
문화·남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Wave 전성기 - 남북관계 리셋(Reset)

II. 2013년 국내 10대 트렌드

1. '트라이 다운'(Tri-Down)의 반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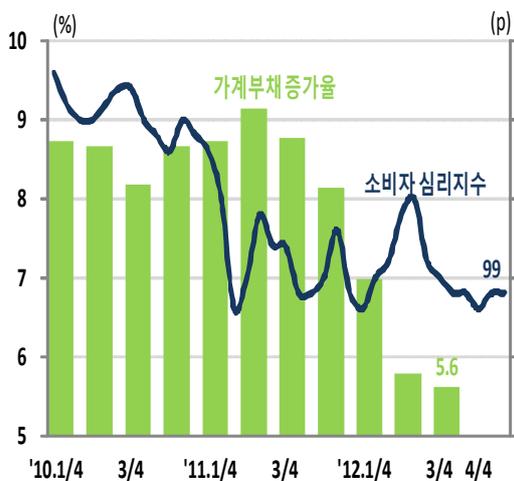
○ (의미) 한국경제가 소비, 투자, 수출 등 내외수의 동시 부진으로 인한 트라이 다운(Tri-Down)에 직면해 있지만, 2013년 하반기 이후 추세 반전 기대

- 저성장과 추세 반전 : 세 가지 부문의 부진으로 인해 2013년 국내경제는 3%대 초반에 그치는 저조한 성장률을 지속할 것이 우려되지만, 2013년 하반기부터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 회복 등으로 국내경기의 하락 추세 반전이 기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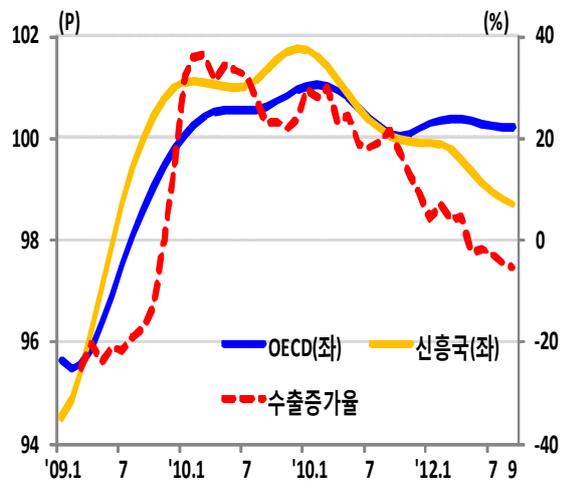
○ (내용) 민간 소비, 건설 및 설비 투자는 개선될 것이고 수출도 주요국 경기 회복에 힘입어 나아질 것으로 전망

- 민간소비 : 먼저, 민간소비는 2013년에 들어 다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
 - 소비 회복의 여건을 살펴보면, 국제 원유 가격 안정, 원/달러 환율 절상 가능성 등으로 물가 안정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가계의 실질소득이 증가할 것임
 - 소비자심리지수는 2012년 11월과 12월에 각각 99로 기준치인 100 내외에 머무름
 -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고 대출금리가 하락하면서 원리금 상환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1년 2/4분기 전년동기대비 9.1%에서 2012년 3/4분기 5.6%로 5분기 연속 하락세
 - 신정부의 내수 경기 진작책 등도 소비 여건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가계부채 증가율과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 < OECD경기선행지수와 수출증가율 추이 >



자료: 한국은행



자료: OECD, 무역협회

주: 수출증가율은 3개월 이동평균

- **건설 투자** : 투자 부문 중 건설투자는 2013년에 부동산 경기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우려되나 SOC 투자 예산 증가, 기저효과 등으로 2012년보다 다소 개선된 연간 2%대 초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2013년 SOC예산은 24조 3,000억 원으로 2012년보다 5.2% 증가로 확대 편성됨
 - 공공기관 지방이전, 중국 등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에 따르는 건축수요 증가는 건설투자에 플러스 요인을 작용할 것임

- **설비 투자** : 2013년에 미약하나마 내외수 경기 회복에 따르는 대체 및 설비 투자 수요 확대에 따라 설비투자는 2012년 보다 높은 연간 4%대 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2013년 한국경제는 기업의 투자심리도 점차 회복되어 설비투자 증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원/달러 환율 하락에 따르는 원화가치 상승으로 인해 자본재 수입 비용이 하락하여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수출** : 글로벌 경기의 반등과 2012년도의 수출증가율 급감에 따르는 기저효과 등으로 2013년도 수출 부문 역시 2012년에 비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수출 부문의 여건을 보면, 주요 선진국의 대규모 양적완화 시행 등으로 미국 등 주요국의 경기가 회복세를 보여 선진국의 수입 수요는 증가할 것임
 - OECD 선행지수는 10월 100.2로 기준점인 100을 상회하고 있어 경기 회복 가능성을 나타냄
 - 중국 등 신흥개도국의 경제도 완만한 경기개선 추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글로벌 수입 수요는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임

- (시사점) 이러한 추세적인 경기 반전을 현실화하기 내수 진작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투자 확대 등 필요
 - 재정투자 외 적극적 기업금융 확대, 기업 투자심리 개선, 서민과 가계의 불안 심리 해소, 수출 틈새시장 개척, FTA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등이 필요

경제연구본부 임희정 연구위원(02-2072-6218)

2. 갈림길에 선 일자리 전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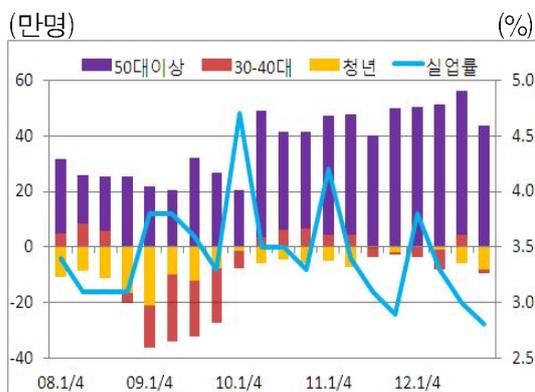
○ (의미) 고용 사정이 악화되면서 2013년 화두는 단연 일자리가 될 전망

- 2012년에는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신규일자리가 44만 개나 창출되면서 '고용대박'이라는, 국민 정서와는 다소 괴리된 신조어가 등장
 - 생계에 내몰린 고령층의 고용시장 진입, 50대 여성 파트타임 증가, 은퇴한 베이비부머의 자영업 진출 등으로 50대 이상 고령층의 일자리가 크게 증가
 - 반면 청년층 취업자 수는 줄어들고 있음
- 하지만 2013년에는 일자리의 질 악화와 함께 양까지 위축되면서, 일자리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될 것임
 - 2011~2012년의 경기침체 여파가 누적되면서 2013년에는 신규일자리가 30만 개 내외에 그칠 전망

○ (내용) 고용 불안이 청년을 넘어 사회 전 계층으로 확산됨에 따라, '더 많고 더 좋은 일자리'를 위한 아이디어가 쏟아지고 노·사·정 논의가 활성화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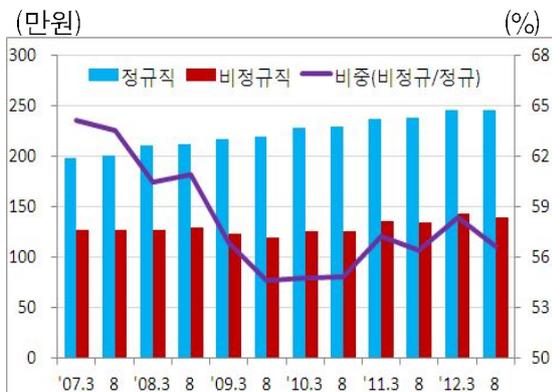
- 일자리 고통이 청년을 넘어 고령층, 여성, 베이비부머, 비정규직 등 전 계층으로 확산될 전망
 - 고용대박의 근원이었던 고령층과 50대 여성, 자영업 베이비부머는 일자리의 질이 악화되면서 고용 불만의 진원지로 둔갑
 - 비정규직은 물론 정규직조차 불황업종을 중심으로 고용조정이 이뤄질 우려

< 연령별 신규취업자 및 실업률 >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



자료 : 통계청

- 노·사·정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할 전망
 -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나누기,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 등 노·사·정의 이해가 얽혀있는 일자리 창출방안이 다수 대두
 - 기업은 장기저성장에 대한 불안감으로 투자·고용 계획을 미루는 반면, 새 정부는 대기업과의 대면접촉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요구

- '더 좋은 일자리' 창출로 중산층을 복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특히 非 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가 부각될 전망
 - 정부는 먼저 상시업무를 담당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후 대기업에 대해서도 정규직 전환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
 - 여기에 비정규직 처우 개선, 사내하도급 및 특수고용직 근로자 보호,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최저임금 상향조정 등도 논의될 것임

- 체감실업률과 공식실업률의 괴리도 이슈로 부각될 전망
 - 고용시장이 냉각되면서, 공식실업자는 아니지만 사실상 실업상태에 놓인 구직단념자나 취업준비자, 니트족이 증가할 전망
 - 국제노동기구는 2013년 하반기에 구직단념자 등을 포함하는 '노동력 저활용 지표'를 개발하여 공식실업률의 보조지표로 활용할 예정
 - 구직단념자의 범위가 각국마다 다를 뿐 아니라, 취업준비자와 같이 한국에 특수한 집단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놓고 논쟁이 불가피

- (시사점) 일자리 전쟁으로 한국 사회는 갈림길에 놓여 있음. 사회갈등이 증폭될 수도 있고, 고용창출형 성장협약을 맺어 성장과 일자리를 동시에 달성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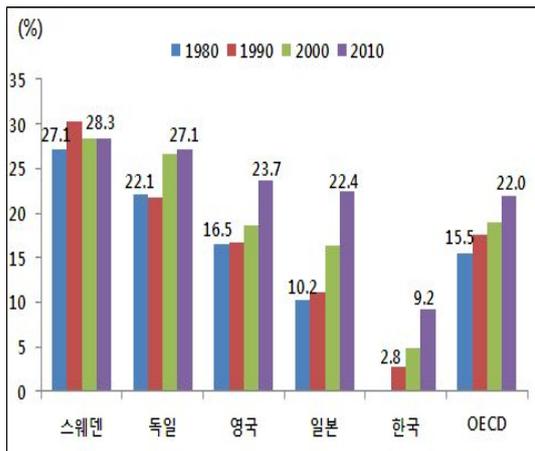
- 정부와 기업, 노동조합이 모두 한발씩 양보해 더 큰 과실을 맺는 용기가 필요한 때며, 그런 의미에서 노·사를 아우르는 새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
 - 그 출발점은 새 정부 첫 해에 노·사·정 합의로 '국가고용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며, 단계적으로 실행에 옮기면서 고용창출형 성장협약을 강화해야 함

경제연구본부 이준협 연구위원(02-2072-6219)

3. 복지 확대 속 '눔프'(NOOMP) 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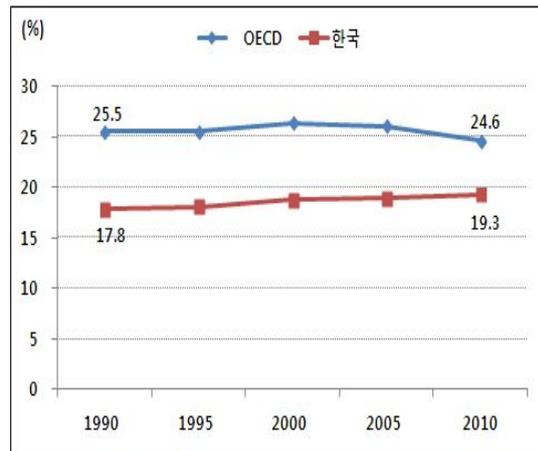
- (의미) 2012년의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공약했던 복지 서비스의 확대 속에서 자기부담을 꺼려하는 '눔프' 현상이 본격화될 것이며, 복지 관련 이해당사자와의 갈등 조정 여부가 새 정부의 1년을 좌우하게 될 것임
 - 2012년 4월의 국회의원과 12월의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복지 공약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복지 예산 증가와 증세 논란이 불가피함
 - 눴프란 '복지 확대는 찬성이지만,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것은 반대한다'(NOOMP, Not Out Of My Pocket)는 현상으로서 국민들의 4.6%만이 '세울 인상'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¹⁾에 근거
- (내용) 복지 확대와 '눔프' 현상 속에서 (1)복지 예산 100조원 시대, (2)복지 서비스의 확대, (3)복지재원 관련 증세 추진, (4)복지 관련 이해당사자와의 갈등이 예상됨
 - 복지예산 100조 시대 : 국회에서 통과된 2013년도 복지 예산은 97.4조원으로 전년대비 4조8,000억 증가했으며, 민간위탁 복지사업까지 감안한다면 실질 복지예산은 103조 원가량으로서 사상 처음으로 복지예산 100조 원 시대가 열림
 - 복지지출의 GDP비중은 2010년 9.2%로 OECD평균 22.0%에 비해 낮지만, 1990년 2.8%에서 2010년 9.2%로 빠르게 증가

<복지지출 수준 비교>



자료: OECD SOCX
 주: GDP 대비 비중, 한국은 1980년 자료 없음

<조세부담률 추이>



자료: 통계청
 주: GDP 대비 세수 비중. OECD는 2009년 자료

1) 현대경제연구원('복지의식의 이중성과 눴프 현상', 경제주평12-12, 2012.4.2)에 따르면, 복지확대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으로 '부가증세'(39.2%), '탈세예방'(37.5%), '정부예산절감'(18.7%), '세율인상'(4.6%)의 순으로 응답

- **복지서비스의 확대** : 작년 선거 과정에서 특히 강조되었던 ‘보육료 지원 확대’, ‘반값 등록금’ 관련 예산이 크게 증가하면서 수혜 대상도 늘어날 전망
 - 작년에는 0~2세 유아의 경우 차상위 계층만 양육비를 지원받았으나 올해는 전 계층으로 확대되면서 대상 아동 규모도 11만 명에서 7~80만 명으로 급증
 - 만 3~5세 아동의 경우에도 보육기관에 맡길 경우 22만원의 바우처를 지급받게 되며,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10만원의 수당이 일괄 지급됨
 - 대학생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국가장학금 규모를 2조 7,750억 원으로 확정했는데, 지난해 1조 7,500억 원보다 1조 원 이상 늘어난 금액

 - **복지재원 조달을 위한 증세 추진** : 복지재원 조달 방안으로서 고소득자의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한 간접증세, 과생금융상품거래세 신설, 지하경제 양성화 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세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 다양한 증세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기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넉프’ 현상이 가시화되고 ‘증세 반대론’도 표면화될 것임
 - 부가가치세 인상은 서민들에게 부담이 크고 ‘역진적’이라며 반대할 것이고, 고소득자 증세에 대해서는 보수층의 반발이 예상됨

 - **복지 관련 이해당사자와의 갈등** : 복지 예산과 증세의 제약 하에서 기존에 약속했던 복지서비스의 우선순위와 도입 일정을 조정할 경우에는, 관련 이해단체들의 반발과 갈등도 예상됨
- (시사점)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세금 부담의 증가도 불가피하다는 점을 설득할 수 있는 소통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함
- 복지확대에 따라서 증가하는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稅부담 증가도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해시킬 수 있는 새 정부의 리더십이 요구됨
 - 복지지출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려면, GDP의 19% 정도인 우리의 조세 부담률을 선진국 수준(GDP의 25% 정도)으로 점차 올려야 한다는 점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함

경제연구본부 김동열 수석연구위원(02-2072-6213)

4. 응답하라! 부동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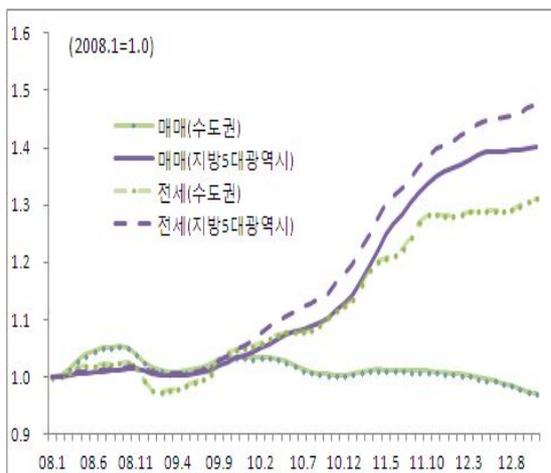
○ (의미) 금융위기 이후 수많은 정부 부동산대책이 나왔지만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수도권 중심으로 극심한 침체를 지속함

- 금융위기 이후 수많은 부동산시장의 규제완화 대책의 효과가 중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국지적이며, 일시적으로 나타났을 따름인데 2013년에는 제대로 반응할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 집중
 - 최근 들어 수도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가격 하락과 거래량 축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2013년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시행될 새로운 주택정책들에 주택시장이 반향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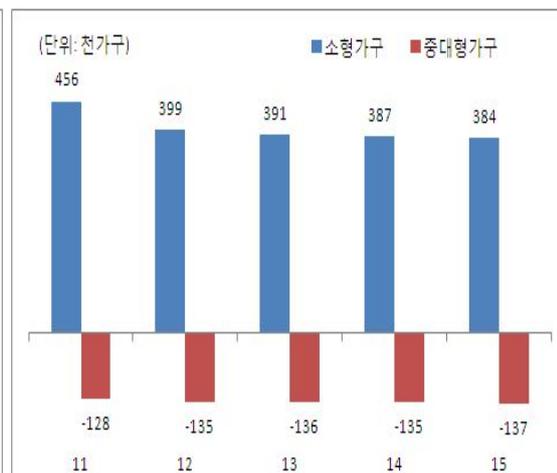
○ (특징 전망) 전반적인 부동산 침체현상 속에 다음과 같은 트렌드 특징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

- 전국적 동시 침체 : 지역별로 '수도권 침체, 비수도권 활황'을 보이던 양극화가 '수도권 침체 심화, 비수도권 침체 반전'으로 변화되면서 침체 심화
 - 수도권 침체 가속 : 가계부채 문제와 얽힌 부채디플레이션(debt-deflation)²⁾ 현상으로 장기침체 국면에 빠질 가능성

< 지역별 아파트매매 및 전세 지수 >



< 전국 규모별 가구 추계 >



자료 : 통계청, KB은행 데이터를 사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재구성

2) 부채디플레이션은 가격하락이 실질채무부담 증가시켜 담보자산매각 및 채무상환 증가 등으로 이어지고, 이는 투자 감소를 초래하여 추가적인 가격하락 압력으로 작용하는 현상을 의미하는 경제학적인 용어임

주 : 소형가구는 3인 이하의 가구를, 중대형 가구는 4인 이상의 가구를 가정

- 비수도권 침체 반전 : 전반적인 상승세 반전 속에 중대형 주택을 중심으로 침체 국면으로 반전될 가능성
- 전세시장 강세 지속 : 매매시장 불안정 등으로 주택구입을 지연하고 대신 전세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전세시장은 여전히 강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
 - 전통적 주택시장 메커니즘 붕괴 : 수도권의 경우 상당 기간 전세가격 상승이 매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
 - 서민 주거부담 증가 : 소형주택에 전세수요 증가에 따른 전세가격 상승으로 서민 주거부담이 가중
- 규모별 차별화 현상 심화 : 소형 주택시장 초과수요, 중대형 주택시장 초과공급 현상이 지속되면서 규모별 주택가격의 차별화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
 - 규모별 가구구조 급변 : 향후 빠른 고령화 등으로 소형가구 급증, 중대형가구 감소 현상이 통계청 추계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
 - 다운사이징, 월세 임대 확대 : 중대형 보다 소형 주택 위주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장기적으로 선진국형 주거다운사이징이 뚜렷해지며, 주택 점유 유형 중 월세 비중이 증가하며 임대시장의 성장할 것으로 예상
- (시사점) 주택시장의 장기 침체로 인한 국가 및 서민경제에의 악영향을 최소화시킬 정책 등이 요구됨
 - 주택시장의 연착륙 유도 : 미분양주택 축소 등 초과공급 해소와 하우스푸어대책 등으로 주택시장의 경착륙 방지
 - 서민 주거복지 증대 : 전세가격 안정과 고령자 및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생계형 주택소유자의 서민 주거환경 개선 노력도 절실
 - 선제적 정책 : 향후 인구 및 사회구조 변화를 철저히 분석하여 선제적 차원에서 일관된 대응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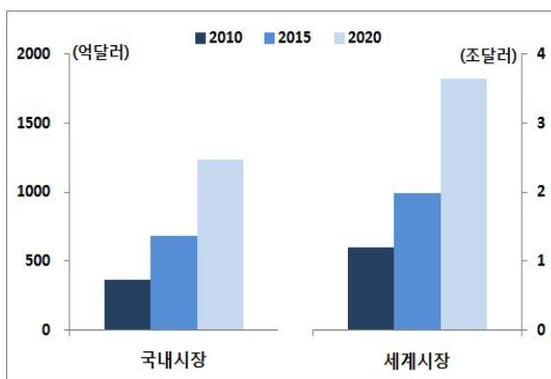
경제연구본부 박덕배 전문연구위원(02-2072-6216)

5. 제3차 제조업 혁명

- (의미) 지금까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었던 국내 제조업이 IT기술과 디지털 혁명을 바탕으로 한 제3차 제조업 혁명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
 - 정보와 지식의 융·복합화, 네트워크화를 통한 제3차 제조업 혁명으로 기존 대량 생산체제에서 소비자 맞춤형의 협력적 생산체제로 전환³⁾
 - 국내 제조업 역시 수요자들의 제품 차별화 요구에 대응하고 융·복합화 등을 통해 부가가치 창출력을 높이기 위한 업그레이드가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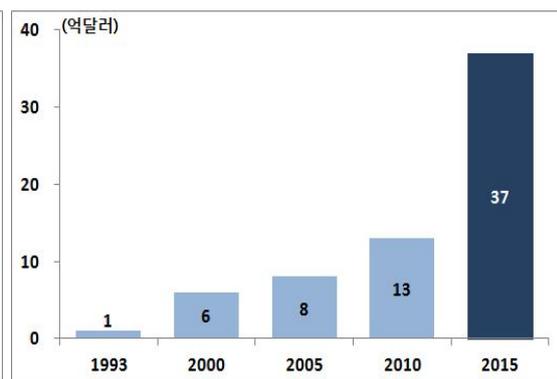
- (내용) 제조업과 IT간 융합, 제조업의 서비스화, 네트워크 생산, 맞춤 생산 등을 통해 국내 제조업의 진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 IT융합 가속화 : 기존 주력 제조업과 IT 기술의 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제품의 부가가치 및 글로벌 경쟁력이 상승
 - 차량용 음성인식 시스템, 원격 제어·관리 선박, 생산 공정과 IT기술이 결합한 디지털 조선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IT융합 기술이 개발·적용중
 - IT융합이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도하고 신제품과 신시장을 창출함에 따라 IT융합 시장 규모도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⁴⁾

< 국내 및 세계 IT융합 시장 전망 >



자료: 지식경제부 「IT 융합 확산 전략」 (2010.10.13).

< 세계 3D 프린팅 관련 시장 전망 >



자료: Wohlers, Wohler Report 각호.
주: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2.2%(2011년)

3) 1차, 2차 제조업 혁명은 각각 18~19세기 공장제 기계공업으로의 전환과 20세기 대량 생산체제 전환을 의미.
4) 국내 IT 융합 시장은 2010년 365억 달러에서 2020년 1,238억 달러(연평균 증가율 13%), 세계 IT융합 시장은 1.2조 달러에서 3.6조 달러(연평균 12%)로 성장할 전망.

- **제조업의 서비스화** :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위해 국내 제조기업들의 제품 관련 서비스 분야로의 진출이 확대
 - 품질 평준화를 극복하고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제품을 개발·생산하는 차원을 넘어 서비스를 통한 부가가치 제고가 필요
 - 정부는 ‘기계산업 서비스화 추진방안’을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러한 추세가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될 전망이다⁵⁾

- **네트워크 생산**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전세계 인력과 장비의 연결을 통해 새로운 제품과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방식의 생산체계가 국내에서도 확산
 - 지역적으로 흩어진 다양한 분야의 인력과 장비를 네트워크로 연결함으로써 제품과 생산 공정에 대한 혁신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음

- **맞춤형 생산**: 다양해지는 소비자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과거 대량 생산품과 달리 3D 프린팅 등의 새로운 기술을 통한 맞춤형 생산제품이 부상⁶⁾
 - 소비자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개별 맞춤 제품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과거 대량생산체제에서 맞춤형 생산체제로의 변화가 요구됨
 - 3D 프린팅과 같은 기술을 토대로 의료, 자동차, 항공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자 맞춤형 또는 주문형 제품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

- (시사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선도할 수 있는 혁신 능력과 더불어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개발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 차원에서 혁신이 가능한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
 - 아이디어를 실제 제품과 서비스로 연결시킬 수 있는 선도적인 기술력을 갖추기 위해 지속적 R&D 투자가 필요

산업연구본부 조규립 연구원(02-2072-6240)

5) ‘기계산업 서비스화 추진방안(지식경제부, 2012.04.25.)’에 따르면 기본 인프라 조성, 서비스망 확충, 중고기계 거래 활성화, 관련 금융 지원체계 구축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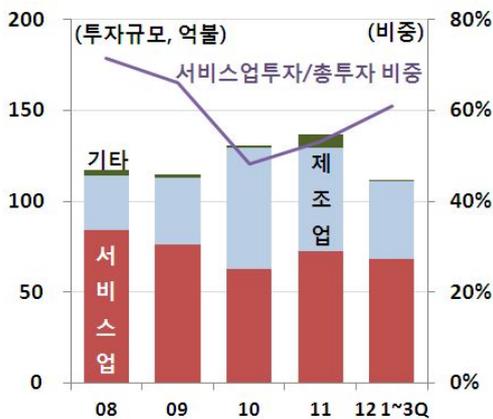
6) 3D 프린팅 기술이란 3차원으로 설계된 모형을 3D 프린터를 이용해 실제 제품으로 제조하는 기술.

6. 서비스업 비상(飛翔)

- (의미) 서비스업이 경제 성장의 전면에서 나서는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서비스업 관련 기업들과 정부는 내수 시장의 협소성, 산업 경쟁력의 취약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글로벌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됨
 - 한국 경제가 선진국에 진입함에 따라 이제까지 개도국 위치에서 추구했던 제조업 - 수출 중심의 경제 발전 전략에서 내수-서비스업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필요성에 직면함
 - 또한 글로벌 경제 위기 문제가 완화되면서 새 정부가 들어서는 2013년에는 서비스업에 많은 변화가 예상됨
 - 보다 구체적으로는 그동안 국내 시장에 안주했던 서비스업이 본격적으로 글로벌 경쟁에 내몰리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산업 구조 전반의 대대적인 변화가 전망됨
- (내용) 서비스업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구 노력 확대, 외국인 투자 유입 증대, 내수 제약 극복을 위한 해외 진출 확산 등의 움직임이 전망됨
 -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구 노력 확대: 서비스업의 업그레이드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고부가가치화 및 생산성 제고 노력이 기대됨
 - 제조업과 달리 서비스업 부문은 생산 비중은 축소되는 반면 고용 비중은 오히려 늘어남에 따라 1인당 생산성이 정체되어 산업 기반이 위협을 받음
 - 이러한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서비스업 발전 전략이 새롭게 마련될 것으로 보이며 업계에서는 기업의 대형화, 고부가가치화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
 - 외국인 투자 유입 증대: FTA의 확산 등으로 서비스 시장 개방이 확대되면서 외국인의 서비스업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주요 경제권과의 FTA 체결로 인한 서비스 시장 개방 등으로 2010년 이후 외국인직접투자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이로 인해 당장은 국내 업계는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생존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는 어려움이 예상되겠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국내 서비스 산업의 자본 확충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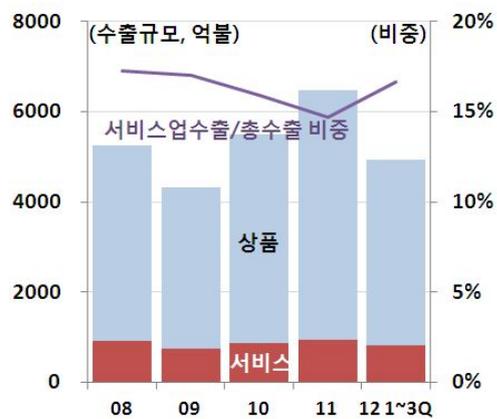
- 내수 제약 극복을 위한 해외 진출 확산: 내수의 한계 극복을 위해 업계와 정부의 서비스 수출 확대 노력 및 해외 시장의 진출 노력이 예상됨
 - 서비스 부문에서도 내수 시장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업계에서 교역이 가능한 부분을 중심으로 해외 수출시장 확보 및 현지 진출 노력이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정부에서도 콘텐츠, 프랜차이즈, 이러닝 등의 부문을 중심으로 해외 진출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정책들의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주요산업 FDI 추이(신고기준)>



자료: 지식경제부
 주: 기타는 1차산업, 건설, 전기·수도·가스 등

<상품 및 서비스 수출 추이>



자료: 한국은행

○ (시사점) 서비스업의 성공적 업그레이드를 위해 서비스업 경쟁력 제고와 해외 시장 개척에 주력해야 할 것임

-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R&D 투자 확대를 통한 기술력 제고와 기업 규모의 대형화를 적극 유도해야 하며, 기본적으로는 서비스업에 대한 시장 및 진입 규제를 제거하여 기업들이 치열한 시장 경쟁에 노출되도록 해야 할 것임
- 또한 해외 서비스 시장에 대한 공략에 있어 민·관의 체계적 공조를 통해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임

산업연구본부 주 원 수석연구위원(02-2072-6235)

7. 월드 베스트(World Best)로 질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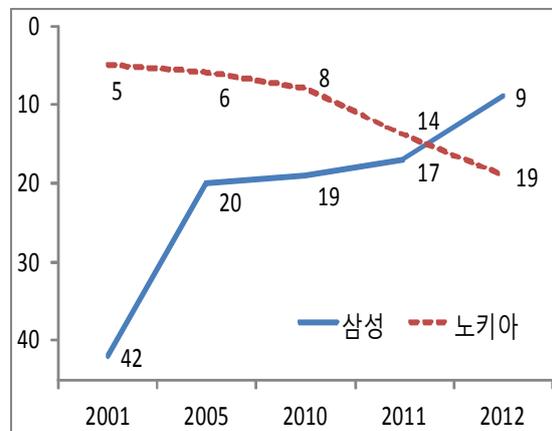
- (의미) 전통적인 글로벌 선진기업마저 도태되고 세계 최고의 기업만이 살아 남는 치열한 경쟁 상황에서, 월드베스트 기업으로 거듭난 국내 기업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 휴대폰 시장점유율의 약 40%를 차지했던 노키아마저 철저히 무너지고 있는 극한 경쟁 상황이지만, 국내에서는 세계 최고의 수준의 일류 기업들이 점차 증가
 -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들이 세계 선진기업들과 치열한 선두 경쟁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월드베스트 수준의 기업으로 성장했기 때문임
- (내용) 국내기업들의 월드베스트로의 질주는 세계일류상품의 지속적 증가를 통해 잘 나타나고 있으며, 단순히 시장점유율 일등을 넘어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의 성장이 지속될 전망
 - (세계일류상품 수 증가) 기술 향상 등 제품 경쟁력이 높아짐에 따라 세계일류상품은 물론 세계시장점유율 1위 제품이 지속적으로 증가
 - 세계시장점유율 1위 품목은 2007년 105개에서 2011년 131개로 증가해 전 세계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인정받는 계기를 마련
 - 또한 세계시장점유율 1위에서 5위까지의 세계일류상품 수도 2007년 370개에서 2011년 405개로 꾸준히 증가

<한국의 세계시장점유율 1위 상품 수>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대기업	48	48	54	53	60
중견기업				14	16
중소기업	57	65	67	52	55
계	105	113	121	119	131

자료 : 지식경제부, Interbrand사

<삼성과 노키아의 세계 브랜드 순위>



- (한국기업의 브랜드가치 상승) 국내기업들의 브랜드 가치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서 세계 속에서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월드베스트 기업으로의 성장 지속
 - 삼성전자와 노키아의 브랜드 순위 변화를 살펴보면, 2001년 삼성전자는 세계 42위, 노키아는 세계 5위였지만, 2012년 노키아는 19위인 반면 삼성전자는 9위로 한국기업의 비약적 성장을 상징
 - 또한, 세계브랜드 순위는 2001년 100위 내에 1개에 불과했으나 2012년에는 3개로 늘어났고, 2012년 포춘 글로벌 500 순위 내에는 13개의 한국기업들이 포진

-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확대) 해외 시장 공략을 통해 글로벌화를 확대하려는 국내 중소기업들 증가
 - 국내 중소기업들이 해외시장에 직접적으로 진출하거나 외국 기업과 디자인 등 다양한 부문에서 전략적 제휴를 통해 글로벌화 확대
 - 락앤락의 경우 국내 소비자들이 외국산 밀폐용기에 좀더 호감을 갖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 홈쇼핑에 진출을 통해 해외 시장을 우선적으로 개척하여 성공

- (시사점) 국내기업들이 월드베스트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디자인 경쟁력 강화 등 시장 니즈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기업 내적 역량을 강화해야 함
 - 단순히 일등 기업에 만족해서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없으며, 월드베스트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함
 - 월드베스트 기업이 되기 위해서 우선 디자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시장 니즈에 대한 선제적 대응 능력 향상 등을 통해 시장을 추종하기보다 선도하는 기업이 되어야 함
 - 또한, 강력한 리더십과 내부 고객 만족도 향상을 통해 기업의 창의성을 개발할 수 있는 내적 역량 강화 기반을 마련하고,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 월드베스트 기업이라는 하나의 경영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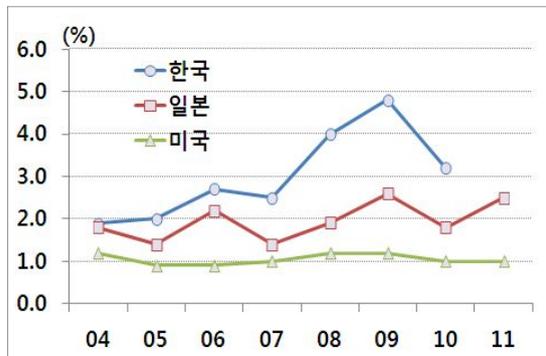
산업연구본부 장후석 연구위원(02-2072-6234)

8. 기업시민(Corporate citizen) 역할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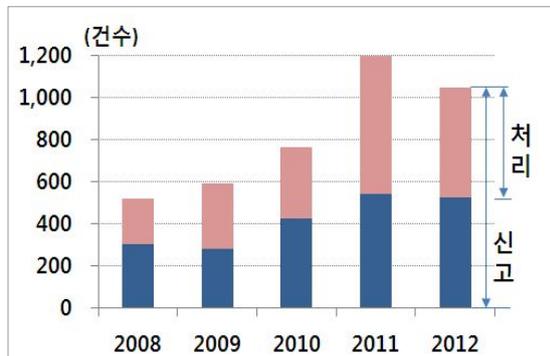
- (의미) 기업의 지속가능성은 이제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하며, 이를 '기업시민'의 역할로 표현
 - 기업시민은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기업의 책임과 역할 문제
 - 창의와 혁신의 대명사 애플(Apple)이 세금회피 논란에 휩싸인 바 있으며 이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에도 불구하고 기업시민의 역할이 미흡한 사례
 - 특히나 2013년은 불확실성이 높은 경제 상황이 예상되고 있어 기업시민의 역할이 더욱 두드러지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

- (내용) 기업의 사회적 책임 문제가 새롭게 부각될 것이며, 투명·윤리경영은 생존 문제로 직결되고 '인권(人權) 경영'이 화두로 떠오를 전망
 - 사회적 책임이 新개념으로 부각 : 사회공헌활동을 비용이 아닌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장기적 투자로 인식하여 생산성 향상에 초점
 - 예컨대 경영 활동 전반에 친환경 요소를 도입하면 결국 고객을 위하는 일이 되며, 협력업체 직원들에 대한 교육 투자는 부품의 품질이 향상됨으로써 원가절감으로 이어짐
 - 세전이익 대비 사회공헌활동 투자 비중은 한국 기업 3.2%(10년), 일본 2.5%(11년), 미국 1.0%(11년)로 특히 한국 기업들의 증가세가 확연

< 세전이익 대비 사회공헌활동 투자 비중 > < 국내 기업의 불공정거래 조정 현황 >



자료 : 한국(사회공헌백서, 전경련)
 일본(사회공헌활동 실태조사, 경단련)
 미국(Giving in Numbers 2012, CECF)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2012.10)
 주 : 2012년은 3분기 기준

- 투명·윤리 경영이 생존 문제로 직결 : SNS의 급속한 확산, 시민 세력의 부상 등으로 경영 행태에 대한 실시간 요구와 감시와 이뤄질 것
 - 부당 내부거래나 하도급 거래, 담합 등의 불공정거래 관행은 이미 도덕적 잣대를 넘어선 상황으로 기업의 생존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
 - 공정위 분쟁 조정 신고 건수가 매년 증가 추세로 연간 1,200건을 넘어섰으며 조정 처리 비중도 50%를 넘어서는 등 급격하게 증가
 - 특히 올해는 공정위가 발표한 '2013년 소비자 정책 종합시행계획'을 통해 사업자 책임 강화와 소비자 권익 향상이 중점 트렌드로 부상할 전망
- 인권(人權) 경영의 부상 : 인권에 대한 기준이 가이드라인에서 규제로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은 오바마 재선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
 - 2013년 상반기부터 미국으로의 수출기업들은 분쟁광물⁸⁾ 사용 여부에 대한 실사 요청을 받게 될 것
 - 한국 기업들은 주로 휴대전화, 반도체, 자동차, 기계, 철강 등 對美수출 품목 대부분의 분야가 해당되며 철저한 원산지 입증 의무가 필요
 - 관련 내용은 UN·OECD의 권고에 이어 EU·캐나다·호주 등도 법제화 움직임 보이고 있어 개별 국가 규제로 확산될 전망
- (시사점) 기업의 지속가능 여부는 사회와 얼마나 친밀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으며 이의 성공적 실천으로 품격 높은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을 것
-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을 원가 요인으로 인식하고 보다 창의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줄이는 데 노력⁹⁾
 - 기업시민 관련 활동을 활성화하고 이해관계자들과의 의사소통 수단을 다양화(설명회/간담회, 지속가능보고서, 실시간 의견 청취 등)
 - 미국에 수출·납품하는 업체들은 철저한 사전 대비 필요, 또한 분쟁광물을 사용하지 않는 기업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기회로 활용

산업연구본부 백홍기 수석연구위원(02-2072-6228)

7) 사업자-소비자간 거래에서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위반시 계약취소 △손해배상 등 민사적 구제 △과징금 등 행정적 또는 형사적 제재 등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명시

8) 분쟁국인 콩고 등에서 생산되는 탄탈륨(Tantalum), 주석(朱錫, Stannum) 등을 말하며 이와 같은 분쟁광물은 채굴 과정에서 아동노동과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판매대금은 반군의 전쟁자금으로 쓰임. 이에 미국은 오바마의 주도로 '도드-프랭크(Dodd-Frank)' 금융규제개혁법안에서 관련 규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음

9) 소비자의 46%가 사회 환원에 적극적인 기업 제품에 비용을 더 지불한 의사가 있다고 응답(Nielsen, 2012)

9. K-Wave 전성기

○ (의미) 한류를 통한 수익 창출이 본격화되고 외국인들이 문화적 호기심을 넘어 한국이라는 국가에 관심을 갖는 K-Wave 전성기에 돌입

- 국가 위상과 문화 확산의 선순환: 2013년의 한류는 문화 트렌드 수준을 넘어 수출을 비롯한 경제적 성과와 국가 위상 제고로 이어지며 한 단계 성숙
 - 그동안 한류는 경제 발전과 수출 증대, 국가 이미지 향상 등 국가 위상 강화에 힘입어 변방의 문화로 치부되지 않고 세계 주요 문화 트렌드로 부상
 - 앞으로는 한류가 주요 수출 품목으로 부상하는 한편, 한류에 의한 국격 향상이 가시화되면서 국가 위상과 문화 확산의 선순환 구축이 기대

○ (내용) 문화 역사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고 있는 한류는 세계 시장의 도전을 지속하며 한국이 문화 강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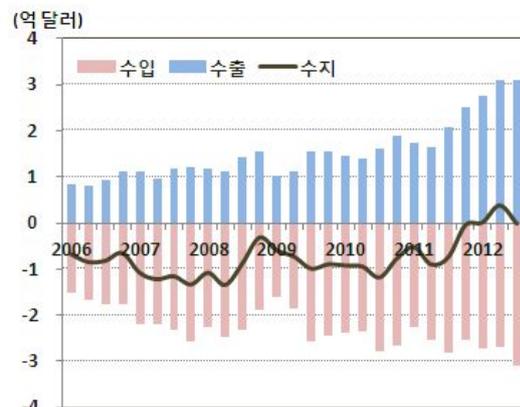
- 문화의 새로운 흐름 창조: 한류는 확산 경로 및 생산 문화권 등에서 세계 문화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중
 - 정보화 시대의 결과: 인터넷이 보편화된 이후 전 세계로 확산된 최초의 문화 상품으로 문화 확산의 새로운 경로를 제시
 - 문화 주변국의 부상: 인구 및 언어 사용자가 많지 않은 문화권의 콘텐츠에 도 전 세계가 동시에 열광할 수 있음을 증명한 첫 번째 사례

< 국가 위상과 문화 확산의 선순환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VIP Report「경제의 새로운 동력 K-Pop 열풍」(2011.7.19).

< 분기별 문화 서비스 무역 수치 >



자료: 한국은행.
주: 개인·문화·오락서비스 수치.

- 서구 시장 진출 시도: 2012년 이미 성공 가능성을 증명한 K-Pop 외에 2013년에는 영화, 드라마 등 스토리 콘텐츠들 역시 서구 시장에 적극적으로 도전
 - K-Pop의 성공 지속: 유럽과 달리 미국 시장에서의 성공은 어렵다는 편견을 깬 K-Pop은 미국 시장에서의 한류 확산을 선도
 - 영화의 흥행 도전: 국제 영화제에서 작품성을 인정받은 영화는 흥행 역시 성공할 수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도전을 계속
 - 드라마의 지역적 확산: 아시아 시장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동유럽, 남미 등 수출 시장이 점진적으로 확대
 - 포스트 싸이 발굴의 노력: 강남스타일의 성공 요인에 대한 분석 노력과 함께 서구 시장에서의 성공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증대
 - 정부의 지원 증대: 한류를 통한 국가 및 지역 이미지 향상을 목격한 중앙 정부와 지자체들은 문화 콘텐츠를 성장 동력으로 주목하고 투자를 확대
 - 콘텐츠 성격의 다양화: 강남스타일의 성공이 우수한 외모나 멋진 군무 외에 요구되는 성공 요인을 시사하면서 해외 시장에서 다양한 실험을 시도
 - 문화 강대국으로의 부상: 2013년에는 문화 콘텐츠가 주요 수출 상품으로 각광 받는 동시에 한국이 세계 문화 콘텐츠의 주요 생산국 대열에 합류
 - 문화 서비스 흑자국 전환 : 만성적인 문화 서비스 적자국가인 한국이 문화 콘텐츠 수출 기록 경신 행진을 지속하면서 흑자국가로 자리매김
 - 문화 수출국으로의 도약 : 아시아 지역에 국한되었던 한류 수출이 지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진정한 문화 수출국으로서의 입지 구축
- (시사점) 국가의 주요 산업으로 부상 중인 대중문화의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중요한 시점
- 대중문화 산업에 대한 관심 확대가 산업의 선진화 및 투명화 요구 증대로 이어짐에 따라 기업 및 종사자,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
 - 사업 및 계약의 불투명성 해소 및 기업 정보 공개 시스템 구축, 이를 유도할 수 있는 정부의 가이드라인 제시 등이 필요

산업연구본부 김필수 선임연구원(02-2072-6238)

10. 남북관계 리셋(Reset)

- (의미)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새정부 출범과 대북 정책 전환 요구에 대한 목소리 증대 등으로 2013년 남북관계는 새롭게 시작될 것으로 기대
 - 대북 정책 전환에 한 목소리 : 남북관계 경색과 북핵 해결 지연 등 대북 압박 정책의 부작용이 드러나면서 대북 정책 전환 요구의 목소리 증가
 - 남북관계 경색의 장기화로 서해에서의 군사적 충돌, 남북경협 중소기업의 경영난 초래와 지역경제 위축, 북한의 대중 의존도 심화 등의 부작용 초래
 - 일반국민의 75.8%는 차기정부의 대북 정책을 포용과 유연한 방향으로 수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남¹⁰⁾
 - 미국에서도 '전략적 인내' 정책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있으며, 북한도 김정은 체제 출범 2년을 맞아 가시적인 경제성과 도출을 위한 대외관계 개선 노력 기대
- (남북관계 새출발) 새정부의 대북 정책기조 변화와 5.24 조치 완화 등으로 2013년 남북관계는 긍정적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
 - 정책기조 전환 : 엄격한 상호주의 적용과 소극적 대응 위주에서 기존 합의 존중과 상호 신뢰 회복을 강조하는 유연한 방향으로 정책 변화 예상
 - 남북 당국간 회담의 재개와 정례화, 남북경협사무소 확장 등 남북 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법·제도화 진전 기대
 - 정책 운용에서도 조건부 포용 및 정경연계보다는 '先경제-後정치 현안 해결' 혹은 정경분리 원칙 적용으로의 변화가 예상
 - 5.24 조치 완화 : 금강산·개성 관광 재개를 비롯하여, 그동안 중단된 기존의 남북 교류협력사업들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
 - 일반교역과 위탁가공교역 재개 등은 물론, 개성공단 사업도 기숙사 건설과 신규투자 허용, 2~3단계 사업 추진 등으로 확대될 전망
 - 또한 남북간 지하자원 개발 사업이나 농업협력 사업을 비롯해, 기존에 논의된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과 항만 개보수 등의 SOC 사업도 기대
 - 이외에도 상업적 거래와 인도적 지원의 분리 적용으로 대북 지원과 지자체 및 종교단체들의 사회문화·예술 교류 등 비상업적 거래 확대 예상

10) 홍순직·이용화, 『남북관계 경색 해소와 금강산 관광』, 현안과 과제, 현대경제연구원, 2012. 7. 10.

- **新북방 사업 추진** : 남·북·러 혹은 남·북·중 공동 사업 추진으로 동북아와 유라시아 개발을 통한 대규모 SOC 수요 창출도 기대
 - 남·북·러의 가스관 및 송전망 연결 사업을 비롯, 연해주 농업지대 공동 개발과 TKR, TSR, TCR 연결 등을 통해 동북아 역내 신성장 동력을 발굴
 - 또한 나선과 황금평 등의 경제특구 개발과 나진항·청진항 등의 대규모 물류기지 건설 등에 중국, 러시아와 공동 진출 방안 모색
- **경제와 평화 선순환 시도** : 남북경협 활성화가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북핵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 효과를 미쳐 '경제와 평화'의 선순환 효과 기대
 - 남북경협과 사회문화 교류 확대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은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주변국들과의 북핵 문제 진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
 - 이는 다시 개성공단의 역외가공지역 인정과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등 남북경협의 국제화로 연결되어, 북한경제 회생과 개혁·개방 확대에 기여

< 2013년 남북관계 전망 >

구분	주요 내용
정책기조	· 엄격한 상호주의 → 유연한 대북 정책 · 기합의 존중과 상호 신뢰 회복 강조, '先경제-後정치' 현안 해결
남북대화	· 당국간 회담 정례화, 남북정상회담 추진 · 남북한 사회문화·예술·체육 분야의 교류협력 확대
남북경협	· 기존 사업 재개 및 활성화 · 금강산·개성 관광 재개, 개성공단 사업 활성화와 2~3단계 확대 · 남북한 지하자원 공동 개발, · 신북방정책 추진으로 대규모 SOC 수요 창출 기대
남북관계	· '경제와 평화'의 선순환 구조 가동 · 남북경협 활성화 → 한반도 긴장 완화 → 남북경협의 국제화·대규모화

○ (시사점) 남북경협에 대한 인식 전환과 상호 신뢰 회복으로 한반도경제공동체 형성의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인내 필요

- 남북경협은 예상치 못한 사건·사고로 중단·정체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경분리와 민관분리, 상업적 거래와 인도적 지원 분리 등의 기본원칙 하에, 남북경협에 대한 인식 전환 필요
- 남북경협을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와 한국경제의 내수 및 신성장 동력 발굴이란 인식과 함께, 북한 변화에 대한 '결과'가 아닌 '수단과 과정'으로 인식 필요

경제연구본부 홍순직 수석연구위원(02-2072-622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주요국 성장률 추이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미국	1.8	0.1	2.5	1.3	4.1	2.2	2.0	1.3	3.1	2.1
유로 지역	1.4	0.8	0.2	0.1	-0.4	-0.4	0.0	-0.2	-0.1	0.2
일본	-0.8	-7.3	-2.8	10.4	0.3	2.2	5.7	-0.1	-3.5	1.2
중국	9.2	9.7	9.5	9.1	8.9	7.8	8.1	7.6	7.4	8.2

주: 1) 2012년, 2013년 전망치*는 IMF 2012년 10월 전망 기준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구분	2011년말	2012년		2013년		
			6월말	12월말	1월 4일	1월 10일	전주비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1.88	1.65	1.70	1.90	1.90	0.00%p
	엔/달러	77.66	79.37	85.86	87.46	88.05	0.59¥
	달러/유로	1.2955	1.2437	1.3222	1.3042	1.3057	0.0015\$
	다우존스지수(p)	12,218	12,880	12,938	13,435	13,471	36p
	닛케이지수(p)	8,455	9,007	10,395	10,688	10,653	-35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3.34	3.30	2.82	2.74	2.70	-0.04%p
	원/달러(원)	1,151.8	1,145.4	1,070.6	1,063.6	1,060.4	-3.2원
	코스피지수(p)	1,825.7	1,854.0	1,997.1	2,011.9	2,006.8	-5.1p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구분	2011년말	2012년		2013년		
			6월말	12월말	1월 4일	1월 10일	전주비
국제 유가	WTI	99.22	84.86	90.89	93.05	93.82	0.77\$
	Dubai	104.89	92.89	107.99	107.46	108.09	0.63\$
CRB선물지수		305.30	284.19	294.78	294.13	296.53	2.40\$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

□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11			2012(E)	2013(E)
		상반기	하반기	연간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3.8	3.4	3.6	2.2	3.1
	민간소비 (%)	2.9	1.6	2.3	1.6	2.5
	건설투자 (%)	-7.1	-3.0	-5.0	-0.4	2.2
	설비투자 (%)	8.9	-1.1	3.7	-0.7	4.8
대외거래	경상수지 (억 달러)	81	184	265	390	285
	무역수지 (억 달러)	153	155	308	302	277
	수출 (억 달러)	2,736	2,816	5,552	5,535	5,845
		(증가율, %)	23.6	14.9	19.0	-0.3
	수입 (억 달러)	2,582	2,662	5,244	5,233	5,568
		(증가율, %)	26.7	20.2	23.3	-0.2
소비자물가 (평균, %)		3.9	4.1	4.0	2.2	2.5
실업률 (평균, %)		3.8	3.0	3.4	3.3	3.3
원/달러 환율 (평균, 원)		1,102	1,114	1,108	1,126	1,060

주: E(Expectation)는 전망치